

보도자료

보도일시	2020년 11월 24일(화) 15:00
담당자	양용현 KDI 시장정책연구부장 (044-550-4141, yangyh@kdi.re.kr)
배포일시	2020년 11월 24일(화) 10:00
배포부서	KDI 홍보팀(044-550-4030, press@kdi.re.kr)

상생적 기업생태계와 재벌개혁의 방향

- KDI 50주년 기념 컨퍼런스 시리즈 -

- 일 시: 11월 24일(화) 15:00~17:30
- 장 소: 프레지던트 호텔 슈벨트홀(31F)

- KDI는 11월 24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'상생적 기업생태계와 재벌 개혁의 방향'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
- 컨퍼런스는 '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제', '해외 재벌개혁 사례' 등 두 개 세션으로 진행
 - 최근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'공정경제 3법' 제·개정에 즈음하여 국내·외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, 상생적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

- 최정표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“상위 10개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가 전체의 46%에 달하고, 광·제조업에서 30대 기업집단의 매출액이 전체의 43%를 차지할 정도로 기업생태계가 점점 더 대기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”며, “경제력 집중은 기업생태계의 역동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경쟁압력을 낮추며 생산적인 노력을 위축시킬 것”이라고 밝힘.
-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“상생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”며, “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소유·지배구조 개선과 일감 나누기가 절실하다”고 강조
- (세션 1.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제)에서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 겸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경영자가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에 충성하도록 하는 기업지배구조가 바람직하다는 기준을 제시하면서,
 -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는 12개 아시아 국가 중 9위에 불과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고, 공정경제 3법은 기업지배구조 개혁 과제 중 최소한의 필요조치임을 역설
-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윤경수 가천대학교 교수는 내부거래의 긍정적·부정적 효과를 대별하고 규제대상 내부거래 식별의 중요성을 설명, 이어서 양용현 KDI 시장정책연구부장이 내부거래 규제에 관한 정책방안을 제시
 - 후생을 저해하는 내부거래를 식별하는 데는 이전가격, 거래규모 외에 기업집단 출자구조, 시장 경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며,
 - 부정적 효과가 큰 경우 지분매각 명령 등 구조적 접근방법도 검토하고, 규율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소수주주 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

- (세션 2 해외 재벌개혁 사례)에서 김진방 인하대학교 교수는 미국 대기업에서 지배의 대물림이 드문 이유를 역사적으로 설명하면서, 미국 기업은 가족 지분 감소를 감수하고 기업 성장을 도모했다고 언급
 - 동시에 미국은 적은 지분을 통한 지배가 불가능하도록 제도와 규제를 통해 억제하였는데, 우리나라의 제도적 환경에서는 계열사 출자가 용이하므로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확대되고 사익 편취와 지배의 대물림이 가능함을 지적

- 또한 임채성 일본 릿쿄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전후 전문경영인 체제 정착이 가능했던 것은 이미 19세기부터 전문경영인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라며, 일본의 전문경영인 체제는 기업의 성장과 노사안정화에 기여했다고 밝힘.
 - 우리나라 기업도 시간이 지나면 분할상속으로 인해 가족 지배체제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게 될 것인데, 그 때를 대비해 내부승진제도를 통한 경영진 진입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

- 이번 컨퍼런스는 내년 3월 도래하는 KDI의 50주년을 기념하는 컨퍼런스 시리즈의 첫 번째 행사로, KDI는 이후에도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을 개최할 예정
 - 또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정표 KDI 원장,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, 각 세션 발표자 등을 포함해 총 참석자 수를 50인 이하로 제한하는 등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함.

- ❖ **첨부 1. 세부 일정**
- ❖ **첨부 2. 세션별 발표요약문**
- ❖ **별첨. 세션별 발표 자료**

❖ 첨부 1. 세부 일정

시 간	프로그램
15:00~15:10	<p>개회식</p> <p>개회사 최정표 KDI 원장 축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</p>
15:10~16:10	<p>세션 1.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제</p> <p>사회 신현한 연세대학교 교수</p> <p>발표 1. 한국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 겸 경제개혁연대 소장</p> <p>발표 2. 내부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윤경수 가천대학교 교수, 양용현 KDI 시장정책연구부장</p> <p>토론 민세진 동국대학교 교수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</p>
16:10~16:30	<p>휴식</p>
16:30~17:30	<p>세션 2. 해외 재벌개혁 사례</p> <p>사회 유진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</p> <p>발표 1. 미국 기업의 소유 경영 분리 과정 김진방 인하대학교 교수</p> <p>발표 2. 전후 일본 전문경영인 체제의 확립(Zoom 발표) 임채성 일본 릿쿄대학교 교수</p> <p>토론 박경로 경북대학교 교수 홍명수 명지대학교 교수</p>

❖ 첨부 2. 세션별 발표요약문

세션 1.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제

발표 1. 한국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

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 겸 경제개혁연대 소장

-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은 경영자가 사익 추구보다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에 충성하도록 하는 것
 - 회사가치 보전 측면은 물론 자본의 효율적 사용과 회사가치 제고를 통해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개혁 부문

- 그러나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여전히 낙후되어 있음.
 -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(ACGA)의 보고서 CG 왓치(2018)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12개 아시아 국가 중 9위에 불과하고, 사익 편취 정도를 나타내는 경영권 프리미엄은 시가 총액의 약 40~50% 수준
 -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, 횡령 사건 및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, 이사회와 감독 기능도 실종
 - 또한 경영 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재벌 3·4세로의 지배권·경영권 승계는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될 것

- 기업지배구조 관련 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으나, 그 중 필요 최소한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경제 3법부터 좌초 위기에 놓여 있음.

발표 2. 내부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

윤경수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, 양용현 KDI 시장정책연구부장

- 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효율성 제고와 후생저해 가능성이 병존하므로 규제대상 내부거래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
 - 계열사 간 거래는 기업집단 소유·지배구조에 따라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반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대리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, 또한 시장에서 경쟁 및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음.
 - 한편 내부거래가 이중마진 제거, 홀드업 문제 해소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친경쟁적 성격을 가질 수도 있음.
- 후생을 저해하는 내부거래를 식별하기 위해 이전가격, 거래규모 이외에 기업집단 출자구조, 시장 경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
 - 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내부거래는 왜곡된 이전가격과 거래규모를 통해 경쟁과 소비자 후생을 저해
 - 규제대상이 되는 내부거래를 완벽하게 식별하기 어려우므로, 규제의 오류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밀한 규제 방안을 설계
- 부정적 효과가 큰 경우 지분매각 명령 등 구조적 접근방법을 검토하고, 소수주주 권제를 강화함으로써 규율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
 - 부정적 효과가 큰 내부거래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
 - 소수주주 권제 강화는 기존 규율방식과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위법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임.

세션 2. 해외 재벌개혁 사례

발표 1. 미국 기업의 소유 경영 분리 과정

김진방 인하대학교 교수

- 과거 미국에도 소수의 개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고 지배하는 대기업이 적지 않았으나, 대부분 가족 소유의 해체 또는 소유와 지배 분리를 통해 경영 지배로 이행
 - 미국에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성장한 기업 대부분 가족 지분 감소에 따른 지배력 약화와 기업 성장을 통한 재산 증식 사이에서 후자를 선택
 - 의결권 없는 주식이나 다단계 출자를 통한 기업 지배는 증권거래소의 상장 지침, 기업 간 배당에 대한 과세, 반트러스트법¹⁾ 등 제도와 규제로 억제
- 한국 재벌 대기업은 대출과 채권을 통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, 신주 발행으로 소유 지분 감소나 지배력 약화를 피하면서 빠르게 성장
 - 1997년 외환위기 직후에는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주식을 대량 발행 하면서 계열사 출자를 통해 내부 지분율을 유지, 이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고 지주회사가 허용되며 가능했음.
- 한국의 경우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한 제도와 규제가 미비, 특히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확대되면서 사익 편취의 동기가 증가하고 실행도 용이함.
 - 사익 편취는 재벌이 지배의 대물림을 선택하는 동기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서도 기업과 경제를 손상시키는 요인

1)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행위나 거래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합동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률

발표 2. 전후 일본 전문경영인 체제의 확립

임채성 일본 릿쿄대학교 교수

- 전후(戰後) 일본기업의 '전문경영인 체제'는 기업성장과 노사안정화에 기여
 - 경영권이 주주의 이해관계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돼 있기 때문에 기업 경영의 목표를 단기적 이윤 창출보다 중장기적 기업 성장에 집중
 - 평사원으로 입사하여 회사경영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관리능력을 축적해 과장, 부장 등으로 승진한 우수자는 중역은 물론 사장 취임도 가능
 - 이러한 내부승진형 전문경영인 체제는 회사별 노동조합제도와 더불어 협조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가져옴.

- 한국의 재벌계 기업 전문경영인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
 - 한국의 재벌은 분할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상속으로 인한 지배권 약화가 다소 예상됨. 또한 상속세 등 조세제도를 통해 오너의 과도한 경영개입을 완화시키면서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
 - 이를 위해 재벌계 가족과 지주회사의 지배를 배제하면서도 안정적인 주식소유구조, 즉 안정주주체제를 확립해야하며, 외부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면서도 내부적으로 평사원이 사장에 이르는 승진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